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 심으로*

최봉대(경남대) · 구갑우(경남대)

1. 문제 제기

북한의 ‘농민시장’(farmers’ market)의 동태와 변화 추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¹⁾ 이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드러난 전반적인 계획경제 부문의 마비와 식량을 비롯한 기초 생필품 국가배급제의 와해와 맞물려서 그 이전까지 주변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사경제(私經濟) 부문이 일상적인 경제생활 영역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타 사회주의 나라들의 선례에 비취 이런 현상이 함축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전망 때문이다. 더구나

* 2003년 9월 사회사학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이성봉 선생님, 김종채 선생님, 박명규 선생님, 정근식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 주민들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농민시장보다는 장마당 또는 장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002년 7월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시행에 착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3년 3월에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綜合市場)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시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실시해 나가자는”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²⁾ 농민시장이 북한 체제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차 비상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농민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암시장(暗市場)을 담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시장의 건설로 상징되는 농민시장의 확대, 개편은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확산되고 있는 농민시장 및 암시장의 합법화 조치로도 이해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서, ‘시장적 조정기제’(market coordination mechanism)의 확산이 북한 체제의 ‘이행’(transition)을 위한 맹아를 담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과 관련된 연구들이 농민시장이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기보다는 암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 1990년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³⁾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2) 이런 개명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평양에 한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여타 지역에서도 공식적인 개명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농민시장은 계획경제 틀 안에서 ‘적극적인 관리대상’으로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선보』, 2003년 4월 2일(인터넷판). 북한은 또한 금기시하던 ‘경제 개혁’이라는 용어까지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9일.

3) 1990년대 북한 농민시장의 동태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함의를 검토하고 있는 몇몇 연구로는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1996);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림금수, “북한 자영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 『통일경

북한 농민시장의 활성화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 동안 북한 농민시장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⁴⁾

예컨대 단지 1990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 교역이 중단되고, 1990년대 전반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배급제가 와해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 아니며 이런 요인들은 단지 농민시장 확산의 직접적인 촉발 계기에 지나지 않고 ‘부족의 경제’ 안에서 배태된 농민시장 활성화 압력 요인들이 옹축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식량배급의 중단이나 김일성의 사망 등이 유발한 특정한 경제적·정치적 국면에서 일거에 폭발적으로 가시화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은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민시장의 발전 양태가 1990년대 이전의 농민시장과 어느 정도 유기적 연결 관계를 갖는지, 또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지 여부는 현재의 농민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체제 이행론적 함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세 도시-신의주, 청진, 혜산-에서 전개된 농민시장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시의 농민시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체제이행이라는 거시적 변화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하기 위해서다. 둘째, 도시의 농민시장 연구는 북한과 같은 중앙집권적

제』, 2002년 3·4월호; 조명철, “北韓의 自由市場價格에 관한 研究”, 北韓經濟포럼 편, 『北韓의 經濟運營과 特性』(서울: 학문사, 2002); 전홍태, “北韓의 非計劃 經濟部門의 實態와 展望”, 北韓經濟포럼 편, 『北韓의 經濟運營과 特性』; 박석삼, “北韓의 私經濟部門 研究”, 『한은조사연구』, 2002-3호(2002);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0), 제3장 등 참조.

4)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6권 1호(1997)나 정정길·전창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23권 제2호(2000) 등에서는 해방 후 농민시장의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다.

체제에서 도시가 상대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세 도시로 신의주, 청진, 혜산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도시로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탈북자(脫北者) 수가 많아 자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 도시의 차이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세 도시는 도(道) 소재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의 특성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다. 신의주는 물류·경공업 도시이고 청진은 중공업 도시다. 반면 혜산은 1954년 양강도가 설치되면서 도 소재지가 되면서 읍에서 시로 승격한 도시로 1차산업(광업과 임업) 중심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세 도시의 특성의 차이가 농민시장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도 이 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2. 분석틀의 구성 및 자료의 활용

1) 분석틀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classical socialist system)에서 농민시장과 같은 합법적인 시장적 조정기제는, 공산당의 권력독점과 국가 소유에 의해 형성되는 계획경제하의 관료적 조정기제를 보완하는 부차적 요소로 간주된다.⁵⁾ 관료적 조정기제가 참여자의 힘의 비대칭에 입각한 지배 -

5) 조정기제는 사회체제의 하위체제(subsystem)로 개인이나 또는 조직의 활동을 조정한다. 어떤 관계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 사이에서 지속될 경우 그들의 활동은 일정한 형태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코르나이는 조정기제를 관료적 조정, 시장적 조정, 자치적(self-governing) 조정, 윤리적 조정, 가족적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J. Kornai,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91~109.

피지배 관계를 담지하는 수직적 연계라면, 시장적 조정기제는 참여자가 자발적 계약에 따라 행동하는 수평적 연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관료적 조정기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부차적 존재로서 시장적 조정기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⁶⁾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과도기’ 또는 ‘이행기’로 인식할 때, 시장적 조정기제가 작동하는 사경제 부문은 자본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사회의 ‘필요악’이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농민시장과 같은 시장적 조정기제는 그것이 합법적 자유시장이든 암시장이든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 6) 예를 들어, 농민층에 대한 양극적인 계급정책에 따라 농민시장의 위상이 극단적으로 반복해서 달라졌던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 형성 초기부터 소자영농 등의 존재를 인정된 상태에서 농민시장을 관리해 온 쿠바나, 또는 1980년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시장 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했던 루마니아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Dorothy J. Solinger, *Chinese Business Under Socialism: the Politics of Domestic Commerce, 1949-1980*(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ch. 6; Jorge F.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5), ch. 3; Horst Brezinski and Paul Petersen, "The Second Economy in Romania", Maria Los(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등 참조.
- 7)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 가는 혁명적 변혁의 시기가 놓여 있다. 이에 상응하여 또한 정치적 과도기가 있는데, 그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다.”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의 한 구절이다. K. 마르크스·F. 엥겔스,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서울: 거름, 1988), 183쪽. 김일성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과도기론을 수용한다. 차이가 있다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명명하고, 사회주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제도화하기, 과도기, 완전한 사회주의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언급한다. 김성철,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 관한 담화 분석: 개혁·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2000), 63~65쪽. 따라서 1980년대 말의 시점에도 ‘이론적으로는’ 농민시장과 같은 시장적 조정기제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념형적 설명이 현실 사회주의로서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의 불평등 생산기제를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만성적인 ‘부족의 경제’와 그 부족의 경제하에서 작동하는 반평등주의적(反平等主義的) 배급체제가 농민시장과 같은 시장적 조정기제를 형성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농민시장의 형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첫 번째 가설이다. 코르나이(J. Kornai)에 따르면, 계획경제가 작동하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구매자(buyers)의 시장이 아닌 판매자(sellers)의 시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은 ‘강제 조정’(forced adjustment)–예를 들어 강제 대체(substitution) 또는 강제 저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족의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가 만약 과잉 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면’, 합법적인 자유시장이나 암시장에서 그 화폐를 소비할 가능성이 발생한다.⁸⁾ 이것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농민시장과 같은 시장적 기제가 사라지지 않은 일차적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왈더(A. Walder)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직적인 권위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급체제에서 특수한 집단에게만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할 경우,⁹⁾ 그 배급체제에서 소외된 집단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시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족의 경제에서 도출되는 합법, 비합법 시장적 조정기제의 형성이 곧 이 시장적 조정기제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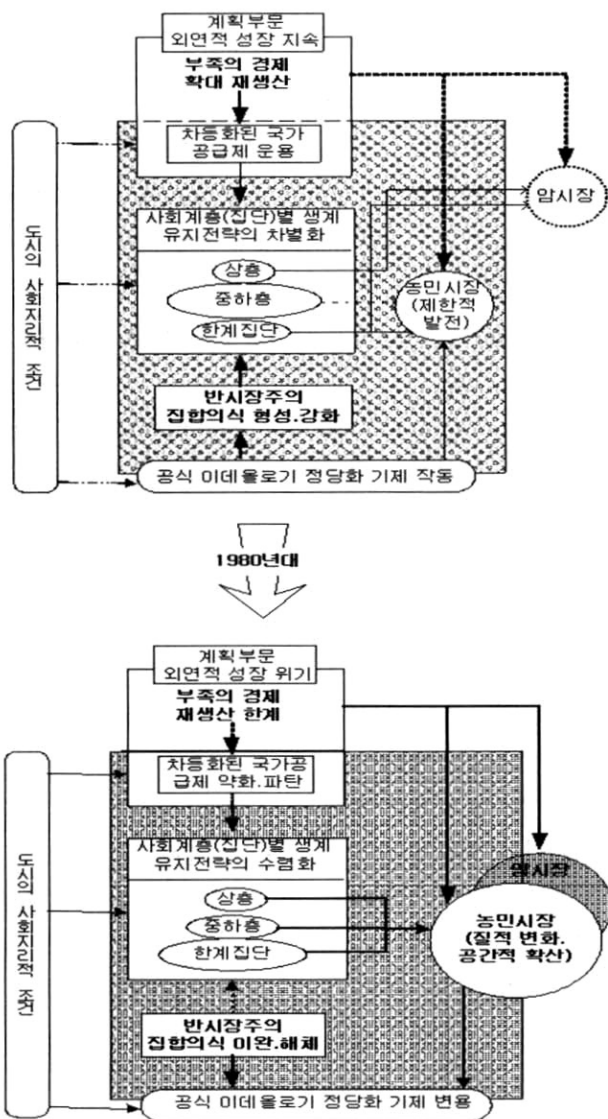
8)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228~261. 부족의 경제에 관한 고전적 논의로는, J. Kornai, *Economics of Shortage*(Amsterdam : North-Holland, 1980) 참조

9) 왈더는 이러한 경향을 공산주의적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로 부른다. A.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Berkel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의 경제에서 곧바로 합법, 비합법 시장적 조정기제를 도출할 때, 기계적, 도식적 경제결정론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타난 상대적 안정을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 시장이나 비합법 시장의 활성화는,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끊임없이 강제되고 있는 일반 주민의 반시장주의적(反市場主義的) 집합 의식이 약화될 때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반시장주의적 집합 의식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실제적 효과가 약화되거나 시장주의적 제도의 도입과 '국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약화될 것이다. 즉, 부족의 경제라는 구조하에서 행위자의 의식변화야말로 농민시장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이것이 행위자를 고려하면서 농민시장의 형성을 설명하려는 우리의 두 번째 가설이다. 부족의 경제하에서도, 경제위기가 심화되지 않고, 따라서 대중의 불만이 전사회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관료제가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에 직면하게 하는 대중의 집합적 의식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암시장의 형태로 시장이 확산되는 현상은 바로 이 행위자의 의식변화, 즉 행위자가 공식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정치의식을 형성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의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우리는 북한도 코르나이의 정의하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족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를 상정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부족의 경제와 그 경제하에서의 선별적인 배급체제 때문에 농민시장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농민시장이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공식 이데올로기가 주민의 반시장주의적 집합 의식을

<그림 1> 북한 도시 농민시장의 위상 변화와 이행 문제 도식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농민시장은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부차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⁰⁾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외부로부터의 물자유입과 국가의 계획경제에 포착되지 않는 생산물의 증대로, 농민시장과 더불어 비합법적인 암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주장이다. 즉, 시장이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던 제약 요인이 사라지면서 발견의 절차를 통해 시장경제 학습을 하게 된 도시 주민들이 농민시장과 농민시장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암시장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이다.¹¹⁾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북한 주민의 반시장주의적 집합 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1980년대 북한의 농민시장과 농민시장과 공간적으로 중첩되었던 암시장은 더 이상 국가가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북한 주민의 경제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시장주의적 집합 의식의 약화 및 농민시장의 활성화는 우리가 선택한 세 도시의 사회지리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자료의 활용 : 탈북자 면접조사

이 글에서는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 면접조사를 활용했다.¹²⁾ 탈북자 면접조사는 북

10) 그러나 부차적 위치지만, 생산에 자극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농민시장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었다. 농민시장이 '소부르죠야사상, 리기주의'를 조장하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좌경적 비판에 대해 김일성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11) 자생적 질서와 발견의 절차에 대해서는, F. 하이에크, 박상수 역, 『개인주의와 경제질서』(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8) 참조.

한사회에 대한 도식적 이해를 벗어나 그 사회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려고 할 경우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글의 주제와 같은 합법적·비합법적 농민시장의 동학은 북한의 체제 특성상 공간 자료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농민시장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천착하는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료의 상당 부분을 탈북자 면접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의주, 청진, 혜산 출신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농민시장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화조사나 우편조사와 같은 비대면적(非對面的) 설문조사가 아니라 좀 더 적실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대면적인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혼용했다. 이 가운데서 개별면접은 탈북자들이 대체로 공개하기를 주저하는 개인적인 연출망의 동원이나 직위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수입원의 활용 또는 여타의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접조사 방식은 통계적 처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면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피면접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자연스러운 언어와 어법으로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한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는 비구조화된 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이 방식은 구술사나 생애사 연구 방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형적인 심층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에 일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

12) 이 작업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탈북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이 글에서는 그 중 49명의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이들 피면접자의 기초 인적 사항 등에 관해서는 말미의 <부표> 참조.

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했다.

탈북자 면접을 통한 자료조사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다.¹³⁾ 첫째 탈북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교차검증의 필요성이다. 피면접자의 기억의 재생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피면접자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면접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의 교차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와의 상호비교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자료원의 오염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길게는 3~4년 정도 체류하고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이 경험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시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학습효과를 생산한다. 따라서 탈북자의 평가가 탈북 이후의 자기 발전적 학습의 효과나 무의식적인 자기 분식(扮飾)의 결과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탈북자의 대표성 문제이다. 탈북자는 표준적인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는 '비정형적인(atypical) 하위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체적인 분포 면에서 보면 국내 유입 탈북자들은 아직까지도 남한이나 재외교포 연고자 또는 출신성분이나 토대가 북한의 기준에서 볼 때 '불량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탈북자 면접조사 자료를 북한을 대표하는 표준적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회 연구에서 '해석의 정치'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연구자 또는 연구자 집단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편견의 작용을 의식하고 이를 상대화시키고 최소화하면서 자료 해석의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13)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pp. 255~269에서는 탈중자(脫中者)를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 나타난 한계의 문제가 적시되어 있다.

3. 세 도시 농민시장의 역사적 형성 : 1970년대까지

1) 농민시장의 정당화 및 제한 : 논리와 정책

(1) 농민시장의 '제한적' 역할론

북한 당국은 1958년에 농업 및 상공업의 '협동화'가 사실상 완성된 이후, 전국의 주요 시·군 지역에 농민시장을 설치했다. 생산에 자극을 주고 인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민'시장'의 합법적 인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도 농민시장을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¹⁴⁾ 이 정의에는 농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판매 주체의 자격 제한과 소비 주체의 범위, 판매 허용 품목, 거래 방식의 사적 성격, 판매 공간(시장터)의 한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정적 전제 조건 위에서 농민시장은 계획부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승인한, 비계획부문 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시장으로 위치지어졌다.

그렇지만 비록 '이론적' 수준에서 농민시장을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소멸될 과도기적인 '비조직 시장'(재래식 시장)으로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농민시장에서 사적 거래에 따른 사적 이윤의 발생과 그에 따른 자생적인 자본주의의 맹아 형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을 인위적으로 해소하지

14)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1969.3.1), 『김일성 저작집』, 제2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65쪽. 실제 북한의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시장에 관한 기존의 ‘정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공론(空論)의 한 사례로는 리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농민시장 가격의 올바른 조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44권 제3호(1998) 참조.

는 않되, 지나친 활성화를 막고 계획부문과의 관계에서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위치에 묶어 두려고 했다. 농민시장에 대한 당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곧 농민시장의 '제한적' 역할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민시장의 '규제를 통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의 설치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2) 농민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단

북한의 농민시장은 적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제한적 활성화'라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의 설치 운영에 뒤따를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인 보강 장치들을 사전에 비교적 철저하게 마련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이는 곧 농민시장이 북한 당국이 규정해 놓은 제한적인 역할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 계획부문과 긴장 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의 일단을 이런 제도적인 보강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첫째,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농민시장에 참여할 개연성이 있는 비농민 판매 주체의 복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되는 개인 상인층의 인위적인 제거 작업과는 별개로 당국은 이미 1946년에 도시와 농촌의 영세 소상공인과 행상들을 중심으로 소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1947년에는 생산과 판매를 겸하고 있던 '농촌의 가내 부업자들과 수공업자들로' 조직된 생산합작사를 조직하여 점차로 이 조직들을 확대해 나갔다. 그 후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사업을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을 무렵에는 이 조직들은 대체로 소비협동조합과 생산협동조합의 형태로 재편되어 계획부문 체제에 편입되었다.¹⁵⁾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수가 가장 많고 또

고립 분산적인 영세한 생업 유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일찍부터 국가의 조직적 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 1970년대까지도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떠돌이 영세 행상조차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경제 전반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일부 도시들에서 농민시장을 매개로 한 불법적인 가내수공업이 재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조치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공급’의 차단을 위해 농민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유통 과정을 장악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종전 직후까지도 개인 상인들은 양곡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중소 규모의 일용품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 종사자로서 ‘필요한 원료를 개인 농민들과 관계를 맺고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별 농가들을 농업협동조합으로 묶어 내는 조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1957년 무렵에는 농업협동조합이 판매 주체가 되어 국가 수매기구와 소비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양곡을 비롯한 일체의 농산물을 국가에 양도하게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품의 원천을 장악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농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근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¹⁶⁾ 또 협동농장의 공동 부업

15) 해방 후 소비협동조합 조직 사업은 크게 세 갈래, 즉 가장 영세한 상인들로 조직된 ‘판매협동조합’, 소규모의 분산적 개인 상업에 해당하는 가두나 농촌의 소상인(음식점 포함)들로 조직된 ‘생산판매협동조합’,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 시장 구역과 비교적 점포들이 집중된 지역의 상인들로 조직된 ‘생산판매협동조합’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영희,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18~27쪽·72~76쪽.

16) 전후 북한의 농산물 수매사업 대상은 국가 수매와 자체 수매 대상 산물로 구분되었다. 국가 수매에는 의무 수매, 예약 수매, 자유 수매 방식이 포함되는데, 경공업 원료와 ‘가장 중요한 농산물 품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곡은 계획 생산 및 유통과 맞물리는 의무 수매 대상 산물이 된다. 자

농산물 중 남새와 같은 비수매 대상 품목도 시·군에 설치된 협동농장 직매점을 통해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농민시장 설치 이후에도 개별 농가가 부업으로 평균 30여 평 남짓한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개별 축산 부산물 중 자체 소비분을 제외한 여분만이 농민시장에 출하될 수 있었다.

셋째, 북한 당국은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일상 생활용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적 상업망의 운용을 전제로, 도시 주민의 농민시장 참여를 제한하고자 했다.¹⁷⁾ 따라서 식량을 비롯한 의무 수매 대상 농산물의 농민시장 판매 금지 규정은 소비 주체로서 도시 주민들의 농민시장 참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은 기존 시장의 양곡 유통 기능을 국정가격에 기초한 식량배급제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강했다. 북한 당국은 1946년에 노동자, 사무원, 학생 등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제를 도입한 이래 국가 양곡 공급망을 정비해 나가면서 배급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7년 11월에 내각 결정 제96호와 제102호에 의해 양곡 자유판매제를 폐지하고,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여타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배급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 주민의 농민시장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강 작업을 마쳤다.¹⁸⁾

체 수매는 개별적인 상업기관(소비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등이 지방적 상품 원천을 가지고 자체의 상품 фон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수매사업으로 국가 수매에서 제외된 ‘모든 농산물 종류’가 그 대상이 된다. 김원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평양: 과학원 출판사, 1958), 304쪽·331~332쪽·347~348쪽.

17) 소매 상업 유통망을 통한 이런 소비 물자 배분은 국가 유일 고용체제하의 국가공급체제로 구체화되는데, 사회주의 상업의 중요한 특징이 ‘주민들에 대한 상품의 계획적인 공급’에 있다는 주장은 이를 뜻한다. 김일성,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유통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1958.6.7),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13쪽.

3) 세 도시 농민시장의 형성 : 1950년대

(1) 지방 도시 농민시장의 공간적 통제

농민시장의 제한적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위의 제도적 장치들은 지방 도시들에서 농민시장을 제외한 기존의 비조직 시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재편하여 국가 상업유통망 체계로 통합하는 데에도 작용했다. 우선 해방 후 재래식 시장이 국가 및 협동단체 상업망에 비해 훨씬 우세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당국은 재래식 시장을 ‘인민시장’으로 재편하였다. 이때 연중 장이 서는 일수에 따라 도심 지역에는 상설시장을, 그리고 시 주변 지역과 농촌 지역에는 정기시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개장일을 조정했는데 이는 재래식 시장의 지배력을 공간적으로 한정시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¹⁹⁾ 또 1950년 초에 내각 결정 제9호에 의해 인민시장을 ‘농촌시장’으로 개편하면서, 각 도 소재지에 농민들만이 양곡을 비롯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민시장’을 설치하기도 하였다.²⁰⁾ 이 조

-
- 18)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서울 : 국토통일원, 1984), 70쪽. 당시 『로동신문』은 “양곡 수매와 판매에서의 국가적 유일체계 확립을 위한 당면과업”이라는 사설에서 개인 상인들의 보유 양곡을 (1957년) 12월 1일 이전에 판매 처분하도록 유도할 것과 양곡의 개인 상행위를 엄금한다고 밝히고 있다. 『로동신문』, 1957년 11월 10일, 1면. 일반적으로 배급제는 전시와 같이 물자가 희소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식량과 기초 소비재 등의 ‘균등한 배분’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 소련의 배급제 실시에서 보듯이 암시장이나 자유시장 등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고정가격 때문에 생필품 유통이 국영상점보다는 장마당(bazaar)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Julie Hessler, “Postwar Normalization and its Limits in the USSR : the Case of Trade”,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3(2001), p. 448.
- 19) ‘상설시장’은 ‘1년에 150일 이상 장보는 시장’을, 그리고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장을 보되 그 날자가 1년에 150일 미만인 시장’을 뜻한다. 김영희, 위의 책, 33~34쪽.
- 20)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448쪽. 평양의 민본리 제1농민시장에 관한 소개 기사에서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치도 인민시장으로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시장의 농민 지배력을 공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후에 당국은 도시의 주택 지구들의 주요 길목들에 국영 소매 상점들을 집중 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점차로 높인 반면에 농민시장은 재래식 시장 공간 안에 설치하였다. 예컨대 청진이나 신의주의 경우만 해도 농민시장을 설치할 무렵 시내 중심 지역에 백화점이 개설되고, 종합상점이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수산물상점 등으로 분화되었지만, 농민시장은 소수의 재래식 시장 안에 한정적으로 설치되었다.²¹⁾ 이런 점들에 비춰 볼 때 당국의 농민시장 통제는 위의 제도적 장치들과 그것들에 수반되는 물리적 규제력뿐만 아니라 농민시장의 공간적 배치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 도시의 주요 농민시장 실태 : 1950년대

1950년대 말에 설치되어 있던 청진의 주요 농민시장으로는 신암구역의 근화시장(중앙시장), 송평구역의 송평시장, 청암구역의 인곡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근화시장과 송평시장은 일제 때부터 있었던 시장으로 시내 쪽에 위치했고, 청진의 대표적인 시장들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상설시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둘 중 규모 면에서는 수산물의 매매가 활발했던 근화시장이 송평시장에 비해 더 컸다. 그리고 이 두 시장은 1950년대 중반 무렵까지도 꽤나 ‘변화한’ 시장이었다고 한다(C18-1). 그러나 시장 안에 소비협동조합이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시장들의 활력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왜냐하면 소비협동조합이 개인 상인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리춘영, “농민시장을 환영하는 여성들”, 『조선여성』, 1950년 4월호.

21) C8, C18-1, 『로동신문』, 1958년 3월 15일 3면.

구비하고 이를 더 싸게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또 주민들이 이 시장들보다 접근하기 쉬운 시내의 백화점,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등에서 물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도 다른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시장은 1958년에 농민시장으로 바뀐 뒤에는 ‘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세가 위축되었다(C5, C18-1).

이 두 시장과 달리 인곡시장은 전쟁의 와중에 근화시장이 옮겨와 형성된 전시 피난시장이었다. 따라서 전시에 급조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는 다른 두 시장에 비해 작았다. 그렇지만 전시에 일반 민수 물자 유통이 인곡시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 안에 ‘약국’도 운영되고 ‘장사’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C18, C18-1).²²⁾ 전후에는 전시 특수도 없어지고, 피난민들이 시내 주거지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인곡시장은 근화시장이나 송평시장보다 먼저 그 세가 위축되었다. 이들 농민시장 이외에도 라남구역과 같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지역에 정기시장 형태의 농민시장들이 소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해방 당시 신의주의 대표적 시장은 두 군데에 있었는데 둘 다 일제 때부터 있었던 시장이다. 한 군데는 시내에 위치한 채하시장으로 전시에 폭격을 맞아 한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적이 있지만, 1950년대에 상설시장으로 운영되었다(S9). 다른 한 군데는 남송동시장으로 이 시장은 시 외곽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로 인근의 농민들이 장날에 이용했던 것 같다. 채하시장과 달리 1950년대에 10일장으로 열린 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S4-1).

22) 청진은 북한 내에서 중공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전쟁중에 미군의 공중폭격과 해상 함포사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곳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당시 청진 주민들은 폭격이 없는 틈을 타 장을 보러 다녔다. 김신조,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서울: 동아출판사, 1994), 95쪽.

채하시장의 입구에는 농민시장으로 바뀌기 전인 1950년대 후반까지도 ‘채하리 인민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또 청진의 근화시장이나 송평시장과 마찬가지로 농민시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상인들로 붐볐던 곳이다. 흥미롭게도 해방 후 채하시장에 농민시장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실례에서 보듯이, 위에서 살펴본 비조직 시장의 개조 과정을 잘 보여 준다. 1958년에 ‘사회주의 개조’가 공식적으로 완료되면서 채하시장 안에는 공업품상점, 건재상점, 수산물상점이라는 간판을 달은 상점들이 설치되었는데, 이 상점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던 소비협동조합 상점들이 간판을 바꿔 단 것이고, 이 소비협동조합 상점들은 해방 후에는 원래 개인 소유 상점들이었다는 것이다.²³⁾

혜산은 1954년에 양강도가 설치되면서 읍에서 시로 승격되고 도 소재지가 된 곳이다. 따라서 청진이나 신의주에 비해 도시 형성 과정이 상당히 지체된 곳이다. 이런 특수한 지역 사정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일제 때 장이 섰던 곳, 즉 혜산동 역전 앞 한 군데에 농민시장이 설치되었다. 이 시장은 시내에서 유일했고, 시내 중심 지역에 위치했지만 10일장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미뤄보아 혜산 농민시장은 청진이나 신의주의 주요 농민시장들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았던 것 같고, 1958년에 농민시장으로 바뀌기 이전에도 별로 활발하게 운영된 곳은 아닌 것 같다(H7).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재래식 시장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기 곤란한 혜산을 제외하고 볼 때 1957년까지도 ‘농촌시

23) S4-1.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청진의 근화시장도 이런 개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1957년 경 전통적인 상업도시인 개성과 함북의 함흥 등지의 상설시장과 농촌장의 풍경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는 사진 자료들도 참고할 수 있다. 에리히 레셀(사진)·백승중(글),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서울: 효형출판, 2000), 112~117쪽·120쪽·208~216쪽.

장'이든 '인민시장'이든 시장 명칭과 무관하게 재래식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민 소비생활의 내핍과 농민시장의 주변화 : 1960~1970년대

(1) 배급제 약화 실태 및 주민들의 체험적 인식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민수부문 소비재 생산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압박받았다. 이 요인들에는 계획화의 구조적 제약, 중공업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투자 재원의 군수부문에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왜곡된 자원 배분구조 등이 포함된다. 이런 요인들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 긴장을 조성했다. 예컨대 외연적 경제 성장 전략의 한계와 그 극복 방안을 둘러싼 1960년대 말 북한 내부의 논의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²⁴⁾

이런 요인들로 인해 야기된 계획경제 내부의 긴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식량 및 생필품 배급제의 약화를 초래했다.²⁵⁾ 1958년의 완전 배

24) 김일성은 '최근 시기까지도 일부 경제 지도일군들과 학자들이... 복구기에 비하여 개건기에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적어지며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 말하자면 공업이 발전할수록 예비는 점점 적어지며 생산장성 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444~445쪽. 한 증언자는 1960~1970년대 북한의 경제 추세를 이렇게 요약했다. "1960년대는 예비를 먹고 살았고, 1970년대 초반부터 생필품난이 있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자재난, 전력난이 있었다"(E1). 또 1970년대 초반의 일로 추정되는데, 정부원에서 식량 공급제 대신 식량 판매제가 검토되기도 했다. 김일성,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부원의 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1985.10.22), 『김일성 저작집』, 제39권, 243쪽.

25) 식량의 계획수매사업도 계획물신주의에 매몰됨으로써 경제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런 계획물신주의와 관련하여 다음 증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생산하자면 생산물에 해당하는 원료를 다 물린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볼트, 너트를 비롯한 나사못까지 맞물려야 원활한 생산이 이

급제 실시 이후 1970년대 초까지 북한 당국은 노동자·사무원 1인당 1일 평균 700g 식량배급을 유지해 왔으나, 1973년경부터 전쟁미(戰爭米) 비축 명목으로 15일분 중 이틀분을 공제했다. 또 그전과 달리 아동보충미를 ‘나이별로 줄여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뒤에도 애국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공제하여 1970년대 말 무렵에는 한 달 정량 배급분의 10~15% 정도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식량공급이 2~3일씩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1970년대 초를 지나면서 북한의 주민 식량배급 사정은 점차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²⁶⁾

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게 늘 자기가 제기한 것보다 과제가 많이 떨어진다. 몇 년도에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전기가 많이 요구된다 하면 능력은 100만 킬로밖에 없는데 요구가 2배, 1.5배 제기되면 그 수준에 계획화하라고 위에서 내려먹인다… 수매상점의 경우도 인민생활, 중앙공업적 요구를 따라가자면… 양털생산도 얼마가 돼야겠다고 하면 위에서 긴장이 되면 수매 단위도 그런 식으로 긴장된다. …소극성이다 보수성이다 하면서 (가혹한 책벌이 돌아오기 때문에) 밟은 당의 요구는 다 한다는 식으로 못할 것을 한다고 한다.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워놓고 돌아앉는다… 계획을 제대로 수행해 본 적 없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계획화 사업을 기본적으로 했다. 그 외에는 천리마 타고 나간다”(E4). “협동화되서 한 이태 지나니까 국가계획은 알곡계획은 매해 올라가지 내려갈 적이 없다. 그 해 풍년 저서 잘 했든 못 했든 국가계획은 올라갔다. 이렇게 되니까 살기 점점 힘들어졌다”(C17-1). 위의 증언(E4) 중 계획의 세부화와 천리마에 비유되는 생산력 발전 추동력으로서의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관해서는 각각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9.23), 『김일성 저작집』, 제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61~464쪽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위의 책, 446쪽 참조.

- 26) C1, C3-1, S8. 함북의 ○군 협동농장에서 일했던 C8은 이미 1969년 12월부터 이틀분을 공제했다고 한다. 배급표상으로 공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루에 700g인데, 한 달에는 8kg 조금 넘는데 또 2개를 잘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하면 배급표 눈깔에다 700g이라고 딱 찍혀서 나왔는데 15개 중에서 두 개를 절약해서 살라고 떼어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그 글자도 없었고, 점만 찍어서 줬습니다. 700g이 아니라 하루에 589g로 줄

1970년대 중반 경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생필품의 공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당국은 이미 1967년에 기초 부식물에 대한 배정 판매를 실시했지만,²⁷⁾ 1974년에는 공업품과 부식물에 대해 자유판매 품이 아닌 배정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필품 공급 통제를 강화했다. 또 이 무렵에 식료품, 공산품, 연료 공급 카드가 발급되고 세대별 공급 카드제가 실시되었다.²⁸⁾ 카드제의 실시는 그만큼 생필품 공급이 더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생필품 카드제 실시를 전후한 무렵에 국영상점에서 일반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이나 공업품의 품귀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²⁹⁾ 이처럼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식량 및 생필품 배급 사정이 악화되고, 도시 주민들의 소비생활도 그전보다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 배급제의 약화가 주민 소비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국가 배급제라는 계획부문 이외에서 개별적인 생계 유지 방안을 모색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

어든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서 쌀을 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를 묶어서 쌀을 쥐서 조금씩 나눠 주면서 살기도 했고, 열흘이면 쌀이 떨어져서 꾸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죠”(C3-1). 식량배급표의 실제 모형에 대해서는 좋은 벗들 위음, 『북한이야기』(서울: 정토출판, 2000), 69쪽 참조.

- 27) 함북 1군에 거주했던 C22-1에 의하면, 1967년 10월부터는 된장, 간장, 소금, 설탕 같은 부식물을 식구 수에 따라 배정된 양만큼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 28) 구매 방식에 따라 공급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배정품과 자유판매품으로 나뉘어진다. 배정품은 월 또는 연(年) 단위로 1인당 정해진 수량을 지정된 국영상점에서 공급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고, 자유판매품은 개인이 임의로 국영상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김영규, 위의 책, 120~125쪽.
- 29) C3-1, C6-1, C10, C14, C17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1975년을 전후하여 공급 카드제가 실시된 것 같다. 한 증언자는 “1960년대에는 전열품은 질이 좋은 제품이었지만 실제로 파는 것은 질이 다른 제품인 경우였(고) 1974년부터는 아예 전열품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주로 학용품, 신발, 양말 등은 구입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S12).

이 될 수 있다. 청진 출신 탈북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당시의 소비생활을 재구성해 본다.³⁰⁾

먼저 지방 당기관, 보위부, 안전부, ‘힘 있는’ 행정 부서, 그리고 사회급양부문이나 상점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교원이나 의사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먹는 고생’을 하지 않았다(C4, C14, C17).³¹⁾ 본인이나 부부가 하급 기능직, 노동자, 사무원 등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식량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노임으로 부식물이나 의류 등을 구입하고 나면 현금 사정은 빠듯했다(C10, C11).

반면에 ‘하바다’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앞의 유형의 사람들과는 달리 1960년대 말에도 식량 때문에 적잖이 힘들었다. 예컨대 시 외곽 지역의 협동농장원 가구의 경우 대체로 분배받은 식량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C15). 또 1970년대 중반 무렵에는 시내에 거주했던 노동자 가구도 ‘애들이 많은 집은 죽을 써서’ 먹어야 했던 경우도 있다.³²⁾ 도 내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런 집들은 동네에서 양식을 꾸어서 해결하거나, 협동농장원의 경우에는 ‘대곡’을 받기도 하고,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쌀계를 조직하기도 했다.³³⁾

30) 신의주와 혜산 출신 탈북자 면접으로는 소비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청진만을 언급하고 있다. 1960~1970년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세 도시에서의 소비생활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31) 가을철에 김장용 ‘채소 전투’가 시작되면 시 외곽의 협동농장에서 일차적으로 당·정 기관들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소가 공급을 받는다(C17). 의사였던 C4는 진료나 치료 관계로 소채나 고기 등의 부식을 비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32) C14이 살던 동네 인민반 26여 가구들 중 3~4가구가 이랬다고 한다.

33) 함남의 7시의 사례와 함북 ○군 협동농장의 사례 증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C3-1, C8). C3-1에 의하면 그보다 더 ‘생활이 구차한’ 집들은 도토리 부족한 식량을 벌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함북 ○군의 경우도 1970년대 초에 ‘최하바다’ 사람들의 식량 사정은 이와 비슷했다(C1). 대곡제도도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었던 것 같다. 함북 7군의 남새 전문 협동농장 같은 경우는 결산 때에 무단 결근한 농장원들의 분배곡(‘불량식량’)을

부식물이나 공업품의 경우 카드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간장, 된장 같은 것은, 비록 질적으로 조악하다고 할지라도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대체로 공급이 되었지만, 달걀(닭알), 옷, 신발 같은 것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점에 들어왔을 때에만 구매할 수 있었다’(C3-1, C10, C18). 또 1970년대 말쯤에는 청진 시내 백화점들에서도 진열품이 아닌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공업품의 수도 더 줄어들었다.³⁴⁾ 협동농장원들의 경우에는 양곡 수매에서 나온 천, 신발, 의류 같은 ‘농민 우대품’을 구입하거나, 남새 수매에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식이었는데, 시내 주민들과 사정이 비슷했거나 더 열악했다(C21-1, C17).

그렇지만 대체로 세 도시 주민들은 생필품 공급의 감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증언자들이 1960년대와 비교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국영상점에서 ‘눈깔사탕’이나 ‘도로푸스’ 같은 당과류나 설탕 같은 부식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 감소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했다. 아마도 다음 증언이 1970년대까지의 이런 상황 인식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회수해서 이것을 대곡으로 사용했는데, 1970년대 초반에 2~3년 정도 실시하다가 중단했다고 한다(C21-1). 일반적으로 시에 속해 있는 협동농장은 농장원들 자체 공급용 알곡 생산 말고는 남새 재배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알곡만을 생산하는 군 협동농장보다는 농장원들의 생활 여건이 더 나았다. 북한에서는 남새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남새 전문농장들은 생산한 남새를 채과도매소에 수매하거나 시내의 협동농장 직매점을 통해 판매하여 적잖은 현금 수입을 올려 이를 농장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C19, C21, S12).

34) C17. 백화점 쪽에 개인적인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판매 수량이 한정된 질 좋은 혼수 예불용 천이나 트렁크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런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C14, C18, C21).

1970년대까지는 비교적 괜찮았다. 일하면 배급도 주고 노임도 줬다. 굶어죽을 정도도 아니고 배불리 먹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정도도 아니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나게끔 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 차려졌다(C17).

(2) 개인 부업과 농민시장의 주변화

식량배급이나 생필품 구입 기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소비생활의 내핍에 그런 대로 적응할 수 있었던 일차적 이유는, 국가배급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또 평소에 국영상점망을 통해 공급받기 어려운 기름(식용유), 돼지고기, 물고기 등의 부식물이나 담배와 술 같은 기호품을 ‘명절’날에 ‘선물’로 받아 간헐적으로나마 부족한 소비생활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C8, C10, C14, C21). 그렇다고 해서 1960~1970년대에 억제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생계를 벌충하기 위한 개인적인 부업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부업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 형태는 국가 상업유통망이나 편의봉사망과 연계된 개인 부업 활동이다. 부양 여성들이 공장, 기업소 등의 가내작업반이나 편의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었던 경우이다.³⁵⁾ 그런데 실제 증인들이나 가내작업반 활동을 독려했던 당국의 언급에 비춰 볼 때 이런 부업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³⁶⁾

35) 예컨대 신의주모방직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이동용 의류 등을 생산한 가내작업반 활동이나 목도리, 장갑 등의 일용 필수품을 생산한 신의주 백사동 가내작업반 활동을 들 수 있다. 『로동신문』, 1961년 1월 20일 4면, 11월 8일 2면; 『천리마』, 1961년 2월호, 사진 자료.

36) 예컨대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1965.11.15~17),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94~95쪽과 김일성,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 데 대하여”(1978.4.11), 『김일성 저작집』, 제3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77~178쪽 등 참조할 수 있다. C14의 모(母)는 손뜨개질로 장갑이나 양말 같

좀 더 적극적인 소비 욕구가 반영된 부업 활동은 명태 말린 것이나 개가죽 같은 것을 외화벌이 쪽으로 수매하여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질 좋은 여성용 의류 같은 것을 구입했던 경우이다(C8, C14).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돼지나 개를 길러 수매하여 부수입을 얻는 경우는 사회 급양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드문 편에 속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먹이(사료)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기)보다도 나라가 배급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리 바쁘지는 않았(고), 죽을 먹더라도 그래도 세끼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C14).³⁷⁾

다른 한 가지 형태는 국가 상업유통망과 연계되지 않았던 개인 부업 활동이다. 이런 부업 활동으로는 우선 가계 수입 보전을 위한 농민들의 농민시장 참여라는 공식적 형태를 들 수 있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중·후반에 농민시장에서 발생하는 농장원들의 불법적 교환 행위에 대해 거론하고 있지만,³⁸⁾ 위의 여러 증언 사례들에 비춰 볼 때 적어도 청

은 것을 짜서 상점에 냈는데, 동네에서 이런 부업을 하는 집들은 소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보내준 가정용 편직기를 가지고 가내반(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편직 부업을 한 함흥의 한 여성은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수입이 제강공인 남편의 노임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이 사례에 비춰 보건대 당시 수입이 괜찮은 부업을 갖기가 쉽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양 여성들이 식량배급량 300g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정순덕, “필남의 색동옷”,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000), 130쪽.

37) 농장원들의 경우에도 개별 농가 형편에 따라 가축 등을 사육하여 국가에 수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업 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함북 내 일부 군들의 경우를 보면 개별 농가 부업으로는 닭, 개, 돼지 등을 사육하거나, 양털, 개가죽, 돼지가죽 같은 것을 수매해서 밭통 같은 공업품을 구입하는 것이었다(E2).

38) 예컨대 김정일은 “어떤 농장원들은 개나 닭을 길러서 국가수매기관에 파는 것이 아니라 농민시장에 내다가 비싸게 팔고 있으며 지어 상점에서 닭알을 사서 농민시장에 가지고 나가 되거리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

진이나 혜산의 농민시장에서 그런 일은 드물었던 것 같다. 예컨대 청진의 경우 ‘용돈은 없고 돈은 귀하니까’ 농촌의 노인네들이 농민시장에 ‘소극적으로 나와’ 고춧가루, 배추씨, 엿, 지짐이, 물감(섬유 염색용) 같은 것을 파는 정도였다.³⁹⁾

그런데 신의주의 경우는 청진이나 혜산과는 약간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다. 농민시장에 나온 나이가 많은 부양 여성들 가운데에는 일부는 명색은 ‘농민’이지만 ‘전형적인 거간꾼’의 역할도 했다.⁴⁰⁾ 이는 일제시가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물류유통의 중개도시로서 신의주의 뿌리깊은 상업주의가 주민 생활 속에서 잔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민시장을 매개로 한 개인 부업 활동과는 다른 비공식적인 부업 활동으로는 우선 북송교포인 귀국자들의 비공식적인 개인 ‘장사’를 들 수 있다. 청진과 신의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일부 귀국자들의 개인 장사는 주로 부양으로 들어앉은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⁴¹⁾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비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

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1976.2.6), 『김정일 선집』,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73쪽;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78.11.10), 『김정일 선집』, 제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52쪽.

39) C1, C8, C14, C21-1, C22. 1970년대에 청진 시내에서 가장 컸다는 인곡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노인들이 20~3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C14).

40) 예컨대 기름 같은 구하기 어려운 부식물을 개인적으로 구하고 싶을 경우 이 노인네들을 찾아가면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집들을 소개해 주는 식이었다(S12).

41) 재일교포들은 1959년 말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북송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평양, 원산, 함흥, 청진, 신의주 등지에 배치받아 거주했다. 신의주는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6·25전쟁에 참가했던 중국군이 철수하면서 통과한 국경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의주는 1959년부터 2~3년 동안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수만 명이 기근을 피해 피난 나온 곳이기도 한데, 이 여파로 한동안 채하시장에는 중국 물품이 ‘넘쳐났다’. 그 후 수천 명의 한족이 귀국하지 않고 정착함으로써 해방 전후한 중국 국공내전기에 이주해 왔던 한족들에게다가 이때 피난왔다

려워 귀국시 가져왔거나, 제일 친척들이 보내준 일제 물품들을 처분하여 생계를 보조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안면 관계를 통하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계, 모포, 의류, 사카린 같은 것을 팔거나 필요한 물품과 교환했는데, ‘좀 있는 집’들에서 구입했다.⁴²⁾ 일부 귀국자들의 이런 부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고급 소비재 구입 욕구와 맞물린 생계 보조형 부업이자 일종의 ‘암거래’였다고 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청진이나 신의주에서 국지적으로 형성된 이런 ‘암시장’은 농민시장과는 아무런 연계가 없었다.

다른 형태의 이런 부업으로는 연말에 협동농장 결산 분배가 끝난 뒤에 식량이나 현금이 궁한 농민들이 입쌀을 가지고 시내 개인 집들을 몰래 찾아다니면서 ‘옥쌀’과 바뀔 자가 소비 식량을 벌충하거나 돈을 받고 팔았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신의주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빈번하지는 않은 것 같다.⁴⁴⁾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말까지도 세 도시에서 개별 가계의 생계 보조형 부업은 대체로 비계획부문 내의 합법적 부업 활동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농민시장과 거의 연계되지 않았다는

가 귀국하지 않은 한족들이 다수 정착함으로써 신의주는 북송교포만이 아니라 화교가 가장 많은 거주하는 도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S4-1).

- 42) S3, C3-1, 김미자, “일본에 다시 갈 수 있나”,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000), 155쪽.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정순덕, 위의 글, 130-131쪽 참조.
- 43) 귀국자들의 이런 ‘장사’ 행태에 대해 당국은 엄격하게 통제한 것 같지는 않다. C3-1은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 장사라는 게 없어 가지고 북송민들이 자기 물건 파는 것을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적발되더라도 (생계에) 좀 보태려고 그랬다 하면 이해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내 온 물건들은 대체로 ‘장마당에서 팔 수 없는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집이 나서 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C13-1) 적지 않은 제약도 있었다.
- 44) 1970년대에 신의주에서 이런 교환행위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옥쌀과 입쌀의 교환비율은 2 : 1 정도였다고 한다(S5, S8, S9).

점이다. 즉, 이 글의 가설처럼, 소비생활의 위기가 곧바로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국가배급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반시장주의적 집합 의식이 농민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반시장주의적 집합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3) 세 도시 농민시장의 실태와 공간적 주변화

예상할 수 있는 바이지만, 1960~1970년대 동안 세 도시의 농민시장의 실태는 1950년대 말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체로 세 도시 주민들의 소비 생활 영역에서 농민시장은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청진의 경우 1970년대 말 경에, 1950년대 말에 개설되었던 3개 농민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이었던 근화시장이 없어지고, 인근의 외진 곳에 서흥농민시장이 개설된 것 같다.⁴⁵⁾ 송평시장도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대신에 청암구역의 인곡농민시장이 가장 큰 시장으로 남게 되었다. 그 외에도 청암구역의 반죽농민시장, 라남구역의 라남농민시장 등이 있기는 했으나, 이 농민시장들은 모두 시 변두리에 있었고, 규모도 작았다. 그나마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하는 인곡농민시장이 1970년대 초반에 10일장으로 열린 것으로 보아 다른 농민시장들도 그러했을 것 같다.⁴⁶⁾

신의주의 경우 채하시장은 한두 번 폐쇄되었다가 다시 개설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70년대 중반 무렵에 남송동 농민시장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시장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장사를 했고, 1970년대 말 무렵에 원래의 채하시장 자

45) 1970년대에 청진에서 가장 큰 장마당으로 신암구역의 '신진장마당'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C12).

46) C1, C6, C12, C13-1, C14, C15, C18.

리에 농민시장이 새로 개설되었다.⁴⁷⁾ 남송동 농민시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채하시장은 이 때에도 매일장으로 열렸지만, 농촌 노력 지원 기간 동안에는 폐쇄했다.⁴⁸⁾ 반면에 남송농민시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 채하시장이 폐쇄된 뒤부터는 매일장으로 열렸던 것 같다(S14).⁴⁹⁾

혜산의 경우 1970년대 말까지 혜산농민시장 한 군데만 있었는데, 1970년대 중·후반에 신흥동 혜산백화점 뒤편으로 이전했다(H1, H2, H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국은 세 도시 모두에서 일제 때의 재래식 시장 자리에 개설되었던, 시내 중심 구역에 있던 농민시장들을 폐쇄하거나 시 외곽으로 이전시켰다. 이는 도시 주민들의 일상 소비 생활과 농민시장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당국의 의도를 보여 준다.

신의주의 경우에는 채하시장의 일시적 폐쇄가 ‘거간꾼’ 부양 여성들의 장사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진과 혜산의 경우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서 농민시장이 주변적 위치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데에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농민시장의 ‘제한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실제로 농민시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 도시의 사회경제적·지리적 조건의

47) 남한의 출판물에 채하시장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를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이유로 폐쇄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S4, S4-1, S8).

48) 모내기철에서 김매기까지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간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통제했다(S7, S12).

49) 남송동 농민시장이 1970년대쯤에는 10일장에서 매일장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다. 남송동 농민시장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주로 화교들이 자기 집에서 채배한 무, 배추 등을 가지고 나와 장사하고, 신의주 농민들은 산 열매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 장사하던 곳이다(S4-1, S8, S14).

차이 그리고 국가배급제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신의주가 약간의 예외 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 도시에서 모두 농민시장은 주변적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의 제한적 역할만을 인정하고 물리적 강제를 행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 주민들이 농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1980년대에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농민시장을 제한하고자 했지만, 농민시장이 불법적인 암시장 형태로 확산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 강제만을 가지고 농민시장의 주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계획부문의 부업활동과 농민시장 그리고 반시장주의 : 1980년대

1980년대는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 배급제, 특히 식량의 유일적 국가배급제의 파탄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대량 아사라는 참변을 향해 나아간 시기였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국가배급제에만 의존해서는 개별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1980년대 식량 및 생필품 배급제 실패와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응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것들이 세 도시의 농민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 식량배급 사정의 악화 실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차로 더 악화되었고, 따라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주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연례적으로 ‘명절’날에 몇 가지 부식물을 ‘선물’로 받는 것 외에 세 도시 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된장, 간장 정도뿐이었다.⁵⁰⁾ 1980년대에도 열악한 수준에서나마 식량배급은 지속되었지만, 주민들은 1984년의 남한 수재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물자 ‘징발’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1989년의 평양학 생축전 준비 명목으로 중앙에서 물자를 ‘징발’하고 난 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⁵¹⁾ 특히 1984년에 남한 수재 복구 물자 지원을 위해 당국은 의약품, 식량, 천 등을 대량으로 ‘징발’하였는데, 이는 다음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소비 생활을 더욱 압박하였다.⁵²⁾

1980년도에 들어왔을 때, 특히 1984년 남쪽에 수해 물품을 주었을 때에 기울어졌다. …현미쌀도 제대로 구경 못하던 것을 10분도 쌀로 바뀌서 보내야 하니깐 그 때 굉장했다. 그 다음에 13차 축전 때 녹고, 1994년 김일성 죽고 나서 완전히 녹아 버렸다(S2).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장·기업소, 사업소 등에서 여성 위주로 정식

-
- 50) S4-1, C15. 그렇다고 해서 1980년대에 학습장, 전구알, 유리, 담배 같은 물건들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 신의주의 한 국영상점의 운영 상태를 보면 국영상점에 물건이 거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영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사는 일반 사람들은 없다. 바쁜 물건은 진열대에 내 놓지도 않는다. 아예 팔지 않는다. 물건이 창고에 있지만 인민들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준다. 일반 인민들은 노트가 들어오는지 모른다”(S2).
- 51) C9-1, C11, C19, S2, S6. H1, H2-1. 대다수 주민들이 1989년의 사회주의권 시장 붕괴에서 급격한 소비 생활의 저하 원인을 찾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지나서 미국의 경제 봉쇄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북한 당국의 정치선전사업이 있고 나서의 일이다.
- 52) 주민들이 남한 수재 복구 지원 사업으로 인해 식량과 더불어 심각한 곤란을 받은 것은 의약품 부족 사태였다. 그 때 이후로 “의사들도 다 도둑이 되어서 약을 집으로 가져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정량을 놓지 않고 절반씩만 놓기도 하는 식이 (되었다)”는 증언(C11)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고용 인력 감축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무렵 식량배급 사정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보여 준다. 실례로 1984년 경에 청진의 설계사업소에서는 배정된 배급 폰드가 상당수 감소되어서 세대주가 700g를 배급받는 여성들이 다수 '해고'되었다(C1). 또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의주방직기계공장에서조차 자재난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어 노임 지급과 식량배급이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하자, 비생산직 여성들의 사직을 간접적으로 유도했다(S5). 이런 조치와 더불어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국가에 의한 고등중 졸업 여성들의 직장 배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배급 정량 700g짜리 정식 고용 인력을 300g짜리 가두 여성이나 부양 가족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식량배급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⁵³⁾

이처럼 198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저하게 열악해진 식량이나 생필품 배급 사정으로 인해 도시 주민들은 국가 배급제에만 의존하면서 1970년대보다도 더 어려운 내핍 생활을 감내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비계획부문 경제활동에 참가하거나 하는 등의 대체적인 생계 유지 수단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비계획부문 경제활동과 암시장 형성

(1) 주민들의 불법적인 '부업' 활동의 증대

1980년대 들어서 가중된 식량난으로 인해 도시 주민들의 소비 생활은 더 큰 압박을 받았지만, 이런 압박이 개별 가게들에게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개별 가게의 세대주나 또는 가족 부양 책

53) 1970년대 중반의 배급량 감소 조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이런 조치는 식량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해진 1992년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들은 중앙의 독립채산제 실시 요구와 맞물려 각급 단위 책임자 수준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처리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입자의 직업, 사회경제적 처지 등에 따라 식량배급을 받는 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차등화된 배급 체계 내에서 주변화된 집단에 속할수록 식량배급 사정 악화에 따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더 컸다. 따라서 이런 취약 계층 위주로 비계획부문의 경제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합법성 여부에 따라 이런 경제활동을 두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비계획부문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양 여성들의 부업 활동 증가를 들 수 있다. 1970년대에 세 도시에서 부양 여성들이 부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1980년대에는 직장이 없거나 사직한 여성들의 부업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은 동 여맹에서 조직한 가내반이나 상업관리소, 편의봉사관리소 등에서 운영하는 가내반에 등록하고서, 가내반 조직에서 분공 형태로 천이나 실 같은 원자재를 받아와서 집에서 완제품으로 가공 처리해서 넘겨준 뒤에 일정액의 수공비를 받아 생계를 보조하는 식의 부업에 종사했다. 이런 가내반 부업 활동은 1984년에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 나온 뒤로 훨씬 더 활발해졌다(S4-1, S5, S11, H3-1).⁵⁴⁾

그런데 합법적인 가내 부업 활동과 별개로 불법적인 생계 보조 활동도 1980년대 이후 점차로 증가했다. 일종의 불법적인 ‘부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경제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공장에서 원자재, 부품 등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집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근의 농촌지역에 나가 몰래 쌀이나 옥수수 등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하여 생계를 보조한 경우였다.⁵⁵⁾ 주로 생필품 생산에 관계된 경공업 공장 노동자들에

54) 가내반 부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가내반에 등록하지 않고 집에서 돼지 사육과 같은 부업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사료 구입 등의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부업은 드문 편이었다(S10).

55) 1980년대 이전에도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자재나 물품을 절취하는 경

게 이런 형태의 ‘부업’ 활동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이들이 배급 식량만으로는 가족의 끼니를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빴기’ 때문이었다.⁵⁶⁾

청진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런 ‘부업’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0년대 말쯤에는 흔한 일이 되었다.⁵⁷⁾ 신의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초에도 이런 ‘부업’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청진보다는 드물었던 것 같다.⁵⁸⁾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신의주신발공장에서 절취한 부속물로 집에서 천신을 만들어 농민시장에 몰래 내다파는 ‘생활이 급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⁵⁹⁾

혜산의 경우에는 청진이나 신의주와 사정이 상당히 달랐다. 1980년대 말쯤에 혜산방직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절취한 편직용 실이 농민시장

우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고, 공장 노동자들이나 동네에서 일단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그런 절취는 대체로 다른 물건과의 교환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 이후의 절취 행위는 적잖게 이런 면들의 전도 현상을 수반한 것이었다.

- 56)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 노동자들은 이런 ‘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었다. 부연하자면 ‘식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자기 식량 가지고 배급 살자면 안 된다. 어쨌든 일반 집에서 식구들 많지 않은 집도 저녁 한 끼는 죽 먹어야 한다. 거기다 배급도 다 안 주고 항상 10%씩 떼었’기 때문이었다(C14).
- 57) 청진편직공장, 청진성냥공장, 청진버스공장 등의 사례에 비춰 보면 편직물 가공품이나 털실, 성냥, 유약, 부삽 같은 것을 절취했다(C9-1, C14). 김책제철소 같은 특급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연다라, 질구, 쇠가마 같은 8·3제품도 1980년대 말 무렵에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것 같다(C20).
- 58) 1970년대 말에도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이나 신의주신발공장에서 종이나 신발을 ‘채 가지고 나와서 농촌에 나가서 쌀이나 강냉이로 바꿈질’한 노동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S15).
- 59) 또 이 무렵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생계 유지형 부업과 달리 천을 구입하여 집에서 재단을 한 다음에 재봉틀이 있는 여러 집들에 일종의 봉제 ‘하청’을 주어 똑같은 옷을 여러 벌 만들어서 이를 농촌에 내다 파는 의류가공업자도 생겼다(S3).

에 조금씩 나왔고, 이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고 팔았다(H1). 혜산의 주요 공장은 혜산제지공장과 혜산방직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공장도 별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혜산 주민들의 이런 부업 활동의 소극성은 다른 두 도시에 비해 공장 수 자체가 훨씬 적고, 규모도 작았던 점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에 주민들의 생계 보조형 부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동네 골목의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용 빨감이나 소채를 파는 것 정도였던 데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H2, H3-1).

이런 불법적인 ‘부업’ 활동의 부차적인 유형적 사례는 예컨대 신의주에서 1980년대 후반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시내 집들을 개별적으로 찾아와 공업품 등과 바꾸거나 판매한 데에서나, 시내 중심가에서 밀주를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영세 행상이 등장했던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⁰⁾ 또 매우 드물기는 했지만, 그리고 신의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1980년대 중반 무렵에 시의 당정 간부들이 간부공급소 물건을 장마당으로 빼돌려서 장사하거나, 세관의 물건을 빼돌려서 장사한 경우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S12, C1).

위의 불법적인 ‘부업’ 활동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가내 부업 활동과 불법적인 생계보조형 부업 활동 중 1980년대 농민 시장의 동태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것은 후자의 ‘부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공업품 유입과 암시장의 확산

청진이나 신의주의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 보조적인 불법적 ‘부업’의 증가는 도시 주위에 암시장을 확산시키는 압력으로 작용

60) 주로 식량을 가지고 도시로 나와 생필품을 구하려고 했던 농민들은 도시 인근의 협동농장 농장원들이었다(S1).

했다. 더구나 농민시장에 대한 당국의 물리적인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부업'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암시장의 확산을 조장했다. 이런 확산 경향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1980년대 중반의 조중 접경 지역 변경무역의 개시와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하 8·3소비품 생산운동으로 약칭)이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단절되었던 조중 관계가 1982년에 정상화된 이후 북한 당국은 일부 접경 지역에서 변경무역을 허용했다. 또 1984년부터는 중국 거주 조선족의 재북 친척 방문을 허용했다. 이런 조치의 여파로 1980년대 중반부터 친척 방문을 빙자한 조선족의 '보따리 장사'가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점차로 확산되기 시작했다.⁶¹⁾ 그 결과 1980년대 말에는 중국산 생필품의 반입과 유통이 크게 증가했다.

청진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진은 접경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내지였기 때문에 조선족의 물건을 넘겨 받은 회령이나 무산 쪽의 장사꾼들이 주로 들어왔다. 이들은 라남구역 농민시장 같은 곳에서 중국제 내복이나 '이불똥', 조미료 같은 부식물, 또는 공업품 같은 것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있다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파는' 일도 있었다(C6). 조선족이 직접 '보따리장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파는 식이었다(C13-1).

신의주에서도 이 무렵에 채하시장 같은 데에서 운동화나 약품 같은

61) 변경 지역에 해당하는 함북 ○군의 경우 “1985년 경부터 중국 물품 들어온 것 대단했다.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이불똥, 내의류, 머리수건, 장갑수건 등 같은 것들이 들어왔었다”고 한다(C3-1). 접경 지역 변경무역(‘변강무역’)의 개괄적인 소개로는 심의섭, “보따리 무역과 농민시장”, 『사회주의와 북한농업』(서울: 비봉출판사, 2002); 립금숙, “연변과 조선변경지역 간의 경제무역교류 현황과 전망”,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延邊: 연변인민출판사, 2001) 등 참조.

중국 상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⁶²⁾ 또 조선족 장사꾼들은 가지고 온 중국산 공업품을 개인집에서 비공식적으로 판매하기도 했고, 한때는 시내 길모퉁이에 물건을 늘어놓고 판매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쯤에는 별 어려움 없이 농민시장에서 중국 옷 같은 공업품을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S2, S3, S4-1, S6, S8).

혜산에서는 다른 두 도시에 비해 공장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부업’ 활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것처럼 조선족 친척 방문이 허용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 물품의 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⁶³⁾ 1990년대 중반까지도 농민시장에 나오는 중국 물품을 심하게 단속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1980년대 말에도 중국 물품은 개인 집에서 내밀히 파는 실정이었다(H4, H5, H6, H7).

(3)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 이중적 효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업품의 북한 내 반입이 청진이나 신의주,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혜산에서 암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을 매개한 외생적 변수라면 1984년에 국가적 정책으로 제기된 8·3소비품생산운동은 내생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도시 주민 소비 생활 수준의 현격한 저하는 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계 유지(보조)를 위한 불법적인 ‘부업’ 활동에 참

62) 그런데 신의주에서는 실제로 1980년대 이전에도 중국산 공업품이 반입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조중 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인 1976년부터 신의주 거주 화교들에게 1인이 4년에 1회 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재에 밝은 일부 화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의 세발 자전거나 손팔팔이를 반출하고 다른 물품들을 반입하여 내밀히 판매하는 식으로 상당한 처부를 했다(S3).

63) 이는 부분적으로는 혜산 거주 화교들의 대다수가 종전 직후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두 도시에 비해 화교의 수가 적고, 또 혜산 주민 수가 적은 관계로 혜산에 연고가 있는 조선족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 같다(H7).

여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만은 아니었다. 북한 당국도 이런 주민 소비 영역의 열악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식량이나 기초 생필품 공급체계의 기능 저하는 생산 영역에 대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 현장의 노동 통제의 효율성을 부식시키고 궁극적으로 계획경제의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8·3소비품 생산운동은 당국의 이런 위기적 상황 인식에서 나온 생필품 증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요체는 공장, 기업소의 생활필수품직장(작업반)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유티 자재, 폐기물 또는 지방 원료를 이용하여 경공업 제품 생산을 늘리고, 또 도시와 노동자구의 유티 부양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여 공장·기업소와 연계된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 부업반과 상업부문의 ‘리용생산반’에서 주민 소비 생활과 직결된 식료품, 의류 등의 가공 생산을 늘리도록 한 데 있다.⁶⁴⁾

그런데 이와 유사한 대중적인 생필품 증산 운동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⁶⁵⁾ 따라서 당국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8·3인민소비품상점 또는 8·3직매점을 신설하여 해당 생산물을 이 상점망에만 출하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협의가격’으로 판매하

64) 김정일,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4.8.3), 『김정일 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31~144쪽;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84.12.10), 『김일성 저작집』, 제3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03~405쪽.

65) ‘한 조박의 천이나 한 오리의 실도 버리지 말고 다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유용한 경공업 제품을 최대한 생산하고, 부양 여성들의 생계 보조형 부업을 조직할 것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개조 직후부터 있어 왔다. 몇몇 사례로는 『로동신문』, 1961년 1월 20일 4면(신의주도방직공장 가내 작업반); 1961년 12월 15일, 3면(평양정밀기계공장 생활필수품직장); 최수련, “낮과 밤”,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위의 책, 294쪽 참조.

도록 한 새로운 규정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⁶⁶⁾ 이 규정은 8·3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국가의 계획 지표에 ‘물리지 않음으로써’ 공장·기업소나 제유형의 가내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이 유사시장(類似市場)의 이윤 추구 논리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⁶⁷⁾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공장은 생필직장이나 작업반(또는 8·3작업반)의 8·3제품 생산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노동자들도 판매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본 노동자들의 공장 물품 절취와 불법적인 ‘부업’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당국의 입장에서 그 효과는 실제적이었고 유의미했다. 예컨대 1980년대 중·후반에 청진의 한 차체 제작 공장에서는 ‘기본 생산’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생필품 직장에서 철판 자투리를 가지고 불삽이나 석유콘로 등을 만들어서 직매점에 판매하여 종업원들에게 노임과 식량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8·3제품 생산은 공장 종업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개별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공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일정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C9-1).⁶⁸⁾ 신의주나 혜

66) 8·3인민소비품상점의 시군 연합직매점과 시내 구역직매점의 상품 유통 방식에 관해서는 C20; 국정원,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탈북자수기) <http://www.nis.go.kr>; 박능숙, “홍성이는 매대에 설 때마다”, 『천리마』, 1990년 8월호; 석창의, “홍성이는 매대에서 한것”, 『천리마』, 1995년 8월호 참조.

67) 이 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시장 개혁적 요소’를 1989년에 새로이 제정된 ‘개인부업규정’과 관련시켜 그 함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53~356쪽·364~371쪽 참조. 또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공장·기업소의 8·3제품 생산 및 유통이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계획화의 실질적인 형해화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E3 참조.

68) 공장의 8·3제품 생산 활성화를 통해서 당국이 얻고자 한 효과는 불법적인 ‘부업’에 의한 계획부문 침식 억제라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효과를 훨씬 더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의 입장에서 공장의 노동 규율이 악화되고 노동자들의 조직 생활이 이완될 경

산에서도 8·3제품 생산의 이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S15, H4). 적어도 8·3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몇 년 동안은 이런 효과가 있었다.⁶⁹⁾

그러나 위의 규정에 따라 공장들은 8·3제품 생산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 책임자들은 자체적으로 공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거나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방조’하기 위해 직매점과 ‘공모’하거나,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 8·3제품을 불법적으로 암시장에 유통했다. 예컨대 1980년대 말에 청진의 8·3연합직매점에서 ‘아연 다라이’ 같은 8·3제품을 비공식적으로 다량으로 구입하여 농촌에 가서 2~3배의 가격으로 팔거나, 쌀하고 바꿔서 중간 이익을 취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⁷⁰⁾ 또 8·3제품은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장의 간부나 노동자들이 오히려 좀 더 용이하게 8·3제품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관련 자재를 절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셈이 되었다. 예컨대 위의 청진 차체제작공장의 종업원들은 개인적으로 부분품들을 빼내어서 집에서 완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완제품이 생필품 직장에서 정식으로 출하된

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했다는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기업소에서 일거리가 전혀 없어도 출근을 강제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나 분산돼서, 너무나 전국에 몰아치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조직적 통제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비춰 보면 쉽게 알 수 있다(C2).

69) 8·3제품은 특히 공장의 규모, 설비, 기술 수준 면에서 뒤떨어진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였는데, 1980년대 말을 지나면서 많은 공장들은 8·3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8·3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H2-1, H8). 그 후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용이했던 고평(현웃)나 천조각 등을 활용해서 만든 크로스 장갑(병어리 장갑의 일종), 싸리비, 갈레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8·3제품으로 자리잡았다.

70) 이런 일들은 함북 ○군의 사례(E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만이 아니라 군 안의 공장들에서도 있었다.

완제품보다 그 수량이 더 많기도 했다(C2). 청진성냥공장이나 신의주 암연공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C14, S1).⁷¹⁾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8·3제품들은 직매점이라는 국가 상업망의 외부에서, 즉 암시장을 통해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 즉 청진이나 신의주의 이런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3소비품 생산 운동은 일정하게 비계획부문의 불법적인 '부업'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와 동시에 암시장을 확산시키는 내생적 변수로도 작용했다.⁷²⁾

3) 세 도시의 농민시장과 반시장주의 구속력

(1) 농민시장의 실태

1980년대 이후 식량 및 생필품 배급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혜산의

71) 혜산의 경우는 이 점에서도 역시 약간 차이가 난다. 가령 한 탈북자는 1980년대 말까지도 혜산 철제일용품공장의 8·3작업반에서, 큰 바케쓰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가지고 접철이나 가방고리 등과 같은 8·3제품을 만들었는데, 정문에 '경비가 딱 있어서 출퇴근시에 검열, 수색하기 때문에 이런 8·3제품이 장마당에 나가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H4).

72) 8·3 가내반의 부업 활동도 공장의 8·3제품 생산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윤 배반적인 효과를 산출했다. 8·3 가내반은 위에서 본 것처럼 세 도시에서 부양 여성들의 적극적인 가내반 부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당국이 본래 의도한 대로 비계획부문 내의 합법적 부업 활동 참여 증대를 통해 도시 가계 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필품 생산을 늘려서 생필품 공급체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H8). 또 가내반의 등록제 운영 방식은 분산적인 가내수공업적 개인 부업을 수직적 계선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고, 분공 품목과 액수를 국가가 책정해 줌으로써 사적 이익의 축적 가능성을 억제하면서 생계 보조비 수준의 금전적 수입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내수공업적인 사적 생산 영역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 집에서 낱염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낱염 보조재료나 콩은 직접 조달해야만 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암시장이나 농민시장 같은 비조직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C4, C14, C22).

경우 시간적으로 약간 뒤지기는 했지만 세 도시 주민들의 비계획부문의 부업 활동 참여 증가와 중국 공업품이나 8·3제품의 불법적 유통의 증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암시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세 도시에서 농민시장은 대체로 암시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로 남아 있었다.

청진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인곡시장 인근에 김정숙 사적관이 건립되면서 인곡시장이 폐쇄되었고, 반죽농민시장이 창평리로 옮겨가면서 창평농민시장(청암농민시장)이 새로 생겼다.(C6, C19). 1980대 말까지 이런 변화 이외에는 청진의 농민시장의 공간적 분포는 1970년대와 다르지 않았다.⁷³⁾ 1980년대 중반경에 농민시장에서 농산물의 되거리 장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농민시장 출입은 드문 편이었다.⁷⁴⁾ 농민시장에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나, ‘손재간으로’ 만든 종이 전등갓 같은 것을 파는 정도였고, 시장 주변에서 단속을 피해 중국 공업품을 파는 정도였다.⁷⁵⁾

신의주의 경우는 청진과 좀 다르게, 지리적 여건상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물자 교류가 활발하였던 탓으로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채하시장을 중심으로 공업품이 암거래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 사이에 채하시장은 ‘공업품 암시장’, 남송농민시장은 농수산물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 공업품이 주로 채하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자 당국은 이를 수매상점을 통해 위탁판매하도록 통제하는 한편,

73) 1990년대 초·중반에 청진에서 가장 컸던 수남장마당도 1980년대에는 다른 구역의 농민시장들처럼 작은 농민시장에 불과했다.

74) 예컨대 양강도 쪽에서 구입한 감자를 트럭으로 싣고 와서 라남농민시장에서 마대 단위로 파는 일도 있었다(C7).

75) 일반 주민들은 ‘명절 때에 구경가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농민시장에 나가거나, 국영상점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희미 같은 생활용품을 구하기 위해 나가는 정도였다(C9, C12, C13).

채하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단속을 피해서 남송농민시장쪽으로 암거래의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1980년대 말에는 남송농민시장이 채하시장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⁷⁶⁾

또 위에서 본 것처럼 불법적 행상이나 인근 농촌 지역과 도시 주민들 사이의 불법적인 상거래가 점차 증가해서 1980년대 말에는 채하시장하고 남송농민시장(신의주장마당) 이외에도 남신의주시장(매일장), 락원기계시장(10일장), 마전시장(비정기적 10일장), 남하동시장 등이 새로 생겼다. 기존의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농민시장은 아니었다. 이 무렵 농민시장에서는 ‘고래기름’ 같은 부식물과 공식적으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던 세발 자전거, 신발, 중국 옷 같은 공업품을 구할 수 있었다.⁷⁷⁾ 물론 이런 물품들은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청진의 경우와 비슷하게 1980년대 말까지 대체로 일반 주민들의 농민시장 출입은 빈번한 편은 아니었다.

혜산은 청진이나 신의주와 달리 도시 규모도 작고, 공장들도 적었기 때문에 공업품의 불법 유통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국은 농민시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농민시장은 여전히 신흥동의 1군데밖에 없었고, 줄곧 10일장으로 열렸다. 1980년대에 혜산 농민시장은 ‘성호동 → 련봉동 → 혜화동 → 혜신동’으로 4번이나 이전했는데, 신의주의 채하시장처럼 농민시장을 통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접 대학의 학습 분위기 저해, 인접 기업의 업무 장애, 대외적인 이미지의 실추 우려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H4, H7).

76) 채하시장은 1980년대 말에는 ‘중국의 홍콩’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공업품의 암거래가 빈번했다고 한다.

77) S2, S3, S4, S4-1, S6, S8, S13.

(2) 반시장주의와 농민시장의 주변화

이와 같이 1980년대 세 도시 농민시장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서 농민시장은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당국의 물리적 규제가 농민시장에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고 배급량도 감소되는 등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식량 배급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요인은 반시장주의라는 비물질적 힘이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 효과 문제이다.

1980년대에 농민시장과 암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었고, 따라서 다른 두 도시의 주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적 상거래’에 관한 인식이 앞섰다고 볼 수 있는 신의주 출신 한 증언자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이런 요인들의 작용을 잘 보여준다.⁷⁸⁾

1980년대에 국영상점에는... 남새는 조금 나왔고, 공업품은 거의 없다 시피 했다. 특히 필요한 신발이나 양말은 거의 없었다... 그런 대로 그냥 참고 지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양말, 내의, 신발을 구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장사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았던 때이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또한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 돈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S12).

따라서 1950년대의 ‘전후복구기’ 세대에 속하는 청진의 한 여성이 1980년대까지도 ‘공급이 제대로 되고 해도 부족했지만’ 합법적인 부업

78) 다른 국경 연선 도시들에 비해 소규모 변경무역이 상대적으로 일찍이 활성화되었던 함북 ○군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당시에는 장사라는 것을 크게 모르는’ 형편이었다(C3).

활동조차도 ‘생각조차 안 했다’(C8)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좀 더 ‘표준적인’ 사회적 인간형에 해당하는 청진 출신의 다른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데에서 이런 ‘생각조차 안 한’, 즉 자율적인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 가능성의 제거가 체제 유지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시장주의라는 집합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에 맞닿아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90년대 미공급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체로 그랬을 것 같다. 크게 호화롭거나 부자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자식들을 충신으로 잘 키워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것만 이상으로 하여 키우고 사회적으로도 그랬다. 특별히 부자 되려고 나가서 버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랬다(C6-1).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 세계 속에서 식량배급제와 결합된 이런 반시장주의가 물질 토대의 제약으로부터 자립화되어 규율적인 권력으로 전화되었던 한 단면을, ‘고난의 행군기’에 접어들 무렵인 1990년대 중반에 혜산 출신의 한 여성이 ‘장사’를 하면서 겪었던 정신적 긴장과 신체적 고통의 기억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옛날처럼 곰팡이 낀 옥수수라도 배급량만 제 량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장사하고 그런 데까지는 눈이 못 텃다. 고스란히 공부하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곰팡이 낀 옥수수라도 제달에 보름치 배급을 줬으면 고스란히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착하게 생각했다(H1-1).

이와 같은 자율적인 경제적 주체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자기 부정은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

후 농민시장의 급격한 활성화 국면에서 이런 자기 부정의 근저에서 작동했던 반시장주의가 단기간에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⁷⁹⁾

그렇지만 이런 반시장주의의 구속력을 침식해 들어갔던 식량배급제의 약화라는 물적 토대의 제약에 대해서도 온당하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 역시 신의주의 농민시장 실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암시장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라는 물리적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점차로 농민시장이라는 합법적인 비조직 시장의 공간을 잠식해갔다. 그리고 이런 잠식 과정은 1980년대 후반에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을 사퇴’하고 불법적인 ‘부업’ [실질적인 전업(專業)]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S2와 같은 반사회주의적 유형의 시장지향적 행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5. 결론

북한에서 1958년에 농업과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가 완료된 뒤 1980년대 말까지도 농민시장은 비계획부문 내의 유일한 합법적 교환 영역으로 존재해 왔다. 농축산물 일부의 자유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시 주민의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해 농민시장을 ‘제한적

79) 탈공산화 이후 시장경제 이행기 국면에서 맨 처음으로 시장에서 소채 장사에 나설 때 ‘흡사 범법자된 심정’과 같은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다는 불가리아 한 농촌 지역 여성이 겪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주의적 가치 판단과 도덕 규범(부정적 인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즉 시장이 도구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이 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는 시사적 논의에 관해서 Deema Kaneff, “The Shame and Pride of Market Activity : Morality, Identity and Trading in Postsocialist Rural Bulgaria”, in Ruth Mandel and Caroline Humphrey(eds.), *Markets and Moralities*(Oxford : Berg, 2002), pp. 39~43 참조.

으로 이용'한다는 당국의 공식적 언명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도 지방 도시의 농민시장은 국가 양곡배급망과 소매상업 유통망을 통한 국가 공급제-식량배급제와 생필품 공급제-의 운용 때문에 도시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다. 오히려 당국은 시내 중심 지역에 있던 농민시장을 폐쇄하거나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 시키기까지 했다. 1970년대 들어서 식량배급량의 감소 조치와 생필품 구매 카드제의 실시에 따른 소비 생활의 상대적 내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농민시장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방 도시 주민들의 일상 생활 영역으로부터 농민시장의 공간적 격리, 즉 농민시장의 고립화는 세 도시 모두에서 드러난다. 세 도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별다른 긴장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농민시장의 비활성화가 가능했던 중요한 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식량과 생필품을-비록 양적·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국가 공급제의 작동에 있다. 또 '장사'(상거래)를 자본주의의 '기생적' 산물로 간주하는 반시장주의적인 집합 의식의 구속력의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개별 가게 수준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구입 이외에 가용할 수 있는 여유 현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계획부문(국가 공급제를 통한 '계획적 소비')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화된 지방 도시 농민시장의 이런 부차적 역할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도시 주민들의 식량 및 생필품 구득 사정은 좀더 어려워졌지만 1970년대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인들의 구속력에 의해 세 도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농민시장은 대체로 주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후반에 농민시장은 그 내부에 암시장을 담

지할 수밖에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① 198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로 국가 배급제가 약화됨에 따라 배급체계 내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이 생계 보조를 위해 공장에서 물자나 완제품을 절취하여 (집에서 수작업 가공을 거쳐) 개인적으로 식량 등과 교환하려는 경향이 증가한 점, ②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공업품이 반입되어 암시장을 통해 점차로 다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점, ③ 1980년대 후반에는 8·3제품이 국가 상업망인 직매점을 통해 부분적으로 암시장으로 유통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생필품의 불법 유통은 불가피하게 농촌 지역에서 양곡의 불법 유통을 수반하게 되고, 도시와 농촌의 암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되거리 장사꾼'들의 출현을 가져왔다. 물론 당국은 이런 암시장의 형성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중·후반에는 비계획부문 내에 암시장이 일정하게 형성되었고, 불법적인 물자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시장은 합법적인 농민시장의 공간에 진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중·후반에 이런 압력 요인들과 당국의 물리적 규제의 상호 작용에 의한 농민시장의 부분적인 활성화(부분적인 탈주변화) 양태는 세 도시에서 차이가 났다. 해산에 비해 공업부문 비중이 높은 청진과 공업부문의 비중이 높으면서 물류 도시의 성격을 지닌 신의주에서는 ①~③과 당국의 물리적 규제가 맞물려서 농민시장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런 물품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다. 특히 신의주는 경공업 부문 공장이 많은 관계로 ①과 연관된 가내수공업 방식에 의해 생산된 경공업 제품의 불법 유통과,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는 ②의 중국 공업품 불법 유통 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청진은 금속, 기계류 공장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③과 연관된 금속류 생활용품의 유통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구성 면에서 임산가공업과 광업

에 치우쳐 있는 혜산의 경우에는 청진과 신의주에 비해 1980년대 말까지도 ①~③ 자체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농민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또 혜산이 국경 연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②가 미약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국 쪽 교역 연계 도시인 창바이(長白) 자체의 지리적 형세의 불리함에 기인하는 열악한 물류, 교통 등의 탓도 있겠지만, 청진과 신의주에 비해 도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고, 따라서 농민시장에 대한 당국의 훨씬 더 집중적인 규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세 도시에서 국가의 규제에 의한 농민시장의 주변화 과정은 그 이면에서 암시장에 의해 추동되는 농민시장의 탈주변화 과정과 길항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 길항 관계의 구체적 형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의 지리적 여건, 산업 구성, 도시의 규모 등에 의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중·후반에 세 도시의 농민시장의 이런 주변화-탈주변화의 길항적 역관계가 국가 공급제의 작동이라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반시장주의라는 집합 의식의 비물질적 구속력의 효과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물질적 조건과 비물질적 구속력의 국면적 변화 양상이 ①~③과 같은 매개 변수와 상호 작용하여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 도시에서 농민시장의 역할과 위상이 변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김영희,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 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 김원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평양 : 과학원출판사, 1958).
- 김일성,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1958.6.7),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9.23), 『김일성 저작집』, 제1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1969. 3.1), 『김일성 저작집』, 제2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 데 대하여”(1978.4.11), 『김일성 저작집』, 제3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84. 12.10), 『김일성 저작집』, 제38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1985.10.22), 『김일성 저작집』, 제39권.
-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1976.2.6), 『김정일 선집』,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78.11.10), 『김정일선집』, 제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리춘영, “농민시장을 환영하는 녀성들”, 『조선녀성』, 1950년 4월호.
- 박승숙, “홍성이는 매대에 설 때마다”, 『천리마』, 1990년 8월호.
- 석창의, “홍성이는 매대에서 한껏”, 『천리마』, 1995년 8월호.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로동신문』, 1958년 3월 15일.
- , 1961년 1월 20일.
- , 1961년 11월 8일.
- , 1961년 12월 15일.

『조선신보』, 2003년 4월 2일(인터넷판).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9일.

『천리마』, 1961년 2월호.

〈2차 자료〉

국정원,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탈북자수기), <http://www.nis.go.kr>.

김미자, “일본에 다시 갈 수 있나”,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000).

김성철,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 관한 담화 분석 : 개혁 · 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2000).

김신조,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서울 : 동아출판사, 1994).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서울 : 국토통일원, 1984).

마르크스, K. · F. 엥겔스,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서울 : 거름, 1988).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에리히 레셀(사진) · 백승중(글),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서울 : 효형출판, 2000).

정순덕, “필남의 색동옷”,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000).

좋은벗들 위임, 『북한이야기』(서울 : 정토출판, 2000).

Hessler, Julie, “Postwar Normalization and its Limits in the USSR : the Case of Trade”,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3(2001).

Kaneff, Deema, “The Shame and Pride of Market Activity : Morality, Identity and Trading in Postsocialist Rural Bulgaria”, in Ruth Mandel and Caroline Humphrey(eds.), *Markets and Moralities*(Oxford : Berg, 2002).

Kornai, J.,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Walder, A., *Communist Neo-Traditionalism :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부표] 피면접자 기초 인적 사항

(1) 청진 거주자(22명)

피면접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당 여부	탈북년도
C1	남	60대 후반	대졸	설계원		1990
C2	남	50대 초반	고등중졸	변강무역	당원	1997
C3 (C3-1)	여	40대 중반	고등중졸	사진사	당원	1997
C4	여	60대 중반	대졸	부양(의사)		1997
C5	여	60대 초반	대졸	건축기사	당원	1997
C6 (C6-1)	여	40대 중반	고등중졸	보육원		1998
C7	남	40대 후반	고등중졸	운전사	당원	1998
C8	여	50대 중반	대퇴	부양(보육원)		1998
C9 (C9-1)	남	50대 초반	고급중졸	군 외화별이	당원	1998
C10	남	60대 중반	대졸	연료보장[설계원]	당원	1998
C11	여	70대 초반	고급중퇴	연료보장[식당관리인]	당원	1998
C12	남	40대 중반	고등중졸	운전사		1999
C13 (C13-1)	여	30대 후반	고등중졸	해설강사		1999
C14	여	40대 중반	고등중졸	가내반(상업관리소)	당원	1999
C15	남	40대 중반	고등중퇴	기능강사	당원	1999
C16	남	50대 중반	전문학교졸	자세지도원		1999
C17 (C17-1)	남	70대 초반	소학교졸	산림감시원	출당	1999
C18 (C18-1)	남	60대 중반	대졸	연료보장(의사)	당원	2000
C19	여	30대 중반	고등중졸	협동농장 기술지도원		2001
C20	여	40대 초반	전문학교졸	상점 판매원		2001
C21 (C21-1)	남	60대 후반	대졸	협동농장 행정간부	당원	2001
C22 (C22-1)	여	60대 중반	대졸	연료보장(회계원)	당원	2001

(2) 신의주 거주자 (15명)

피면접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당 여부	탈북년도
S1	남	40대 후반	군관학교졸	작업반장	당원	1992
S2	여	30대 초반	대퇴	회계원		1993
S3	남	60대 후반	중퇴	창고원		1994
S4 (S4-1)	남	50대 초반	대졸	의사	당원	1996
S5	여	60대 중반	고급중졸	가내반(사회급양망)		1996
S6	남	30대 초반	대졸	교원	당원	1997
S7	여	40대 후반	고급중졸	부양		1997
S8	남	60대 초반	대졸	목수	당원	1997
S9	남	60대 초반	고급중졸	사회 외화별이	당원	1997
S10	여	60대 초반	대졸	부양		1997

피면접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당 여부	탈북년도
S11	여	30대 후반	전문학교졸	통계원		1998
S12	남	50대 초반	고급중졸	자재인수원		1998
S13	남	30대 초반	고등중졸	하전사	당원	2000
S14	남	40대 후반	고등중졸	자재인수원	당원	2000
S15	남	40대 중반	고등중졸	노동자	당원	2002

(3) 해산 거주자 (8명)

피면접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당 여부	탈북년도
H1 (H1-1)	여	40대 초반	대졸	해철원		1996
H2 (H2-1)	남	30대 후반	대졸	광산기사		1997
H3 (H3-1)	여	40대 초반	대졸	교원		1997
H4	여	30대 후반	대졸	지도원(검사계통)		1997
H5	남	60대 후반	중퇴	연로보장(자재조달원)	당원	1997
H6	여	60대 중반	중졸	부양(자재지도원)	당원	1997
H7	남	60대 중반	대졸	연로보장(초급당비서)	당원	1998
H8	남	30대 후반	대졸	도급기관 지도원	당원	1999

(4) 기타 지역 거주자(4명)

피면접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당 여부	탈북년도
E1	남	60대 초반	대졸	중앙기관 간부	당원	1988
E2	여	60대 중반	고급중졸	연로보장(공급계산원)		1998
E3	남	40대 후반	대졸	자재상사 사장	당원	1998
E4	남	60대 후반	대졸	상점 지배인	당원	2001

비고: 1) 1차 면접조사는 2001년 5월~2002년 2월에(S4, S13, E1의 경우), 2차 면접조사는 2002년 9월~2003년 3월에(여타의 경우) 실시함

- 2) '피면접자' 항목의 '(-1)'은 동일인에 대해 2회 면접을 실시한 경우를 뜻함
- 3) '연령' 항목의 '초반/중반/후반'은 각기 OO대 '0-3세/4-6세/7-9세'에 해당함
- 4) '직업' 항목의 '[''는 '부양'이나 '연로보장'에 들어가기 직전의 피면접자 직업을 뜻함.

Abstract

Farmers' Markets in Sinuiju, Chungjin and Hyesan in North Korea, 1950s~1980s

Bong Dae Choi(Kyungnam Univ.) · Kab Woo Koo(Kyungnam Univ.)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farmers' markets in Sinuiju, Chungjin and Hyesan from the 1950s to 1980s. Farmers' markets in these cities were selected as our research agenda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is paper explores a micro-foundation of macro-change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transition. Second, this study looks at how much relative autonomy the cities have compa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Sinuiju, Chungjin and Hyesan provide us with a great deal of information on the farmers' markets, because they border China and there are quite a few refugees from these cities. We also try to focus on the differences that exist due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se cities.

Key Words : Sinuiju, Chungjin, Hyesan, farmers' market, shortage economy, refugee